

재난안전,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

-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72.1조원 편성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(4조 8,145억원) 대비 1,097억원(↑2.3%) 늘어난 4조 9,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.

*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72조 945억원 규모

-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.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1 재난안전 : 1조 8,939억원

- 먼저 각종 자연·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,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.

- (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)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(출입차단기 등)하는 시스템 확대
※ 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 : '23년 68억 → '24년 정부안 135억(+67억)
- (재해위험지역 정비) 자연재해(집중호우 등)에 따른 침수·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
※ 재해위험지역정비 : '23년 7,033억 → '24년 정부안 8,629억(+1,596억)
- (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)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을 재난 단계별(예방·대응·복구 등)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,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(국민안전24)를 제공
※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: '23년 81억 → '24년 정부안 186억(+105억)
- (재난대책비 증액)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
※ 재난대책비 : '23년 1,500억 → '24년 정부안 6,000억(+4,500억)

2 디지털 정부혁신 : 7,925억원

□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·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하였다.

- (모바일 주민등록증·Any-ID 확대)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*하는 한편,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·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드(Any-ID) 서비스를 대폭 확대

* ('21)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→ ('22)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→ ('23)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구축

※ 정보보호인프라확충(정보화)_모바일신분증·Any-ID : '23년 129억 → '24년 정부안 282억(+153억)

- (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)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(실직, 출산 등)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구축

※ 지능형서비스확대및운영(정보화)_혜택알리미서비스구축 : '23년 7억 → '24년 정부안 34억(+27억)

- (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)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,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·조회·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

※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(정보화) : '23년 86억 → '24년 정부안 163억(+77억)

- (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) 행정·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, 보다 신속적·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

※ 중앙행정기관등노후장비통합구축(정보화)_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지원 : '23년 342억 → '24년 정부안 758억(+416억)

3 지역경제 : 1조 5,195억원

※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포함

□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·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.

- (인구감소지역 지원)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

※ 지역발전활성화 : '23년 52억 → '24년 정부안 71억(+19억)

- (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) 지역공동체와 IT기술(IoT, AI등)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·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·확산

※ 지자체경쟁력지원_읍면동단위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구축 : '23년 15억 → '24년 정부안 20억(+5억)

- (주소정보산업 지원)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(주소기반 드론·자율주행로봇 배송, 실내 내비게이션 등)의 개발·보급 확대

※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_주소정보산업지원 : '23년 26억 → '24년 정부안 44억(+18억)

4 사회통합 등 : 7,183억원

□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.

- (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)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('24.2월)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·재활서비스를 제공

※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조성(건립비용 제외) : '23년 13억 → '24년 정부안 22억(+9억)

- (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) 5·18보상법 개정('22.12.27.)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

※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_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: '24년 정부안 45억(신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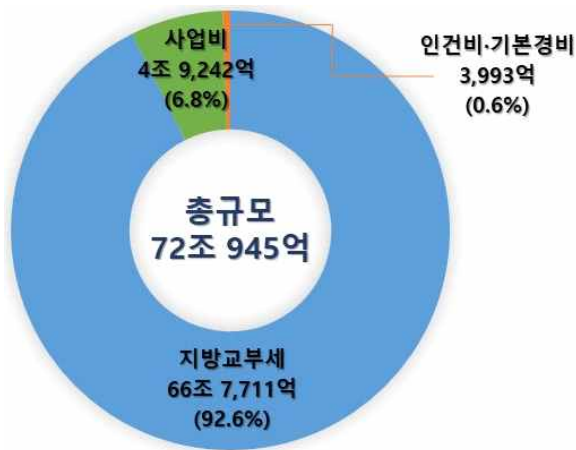
□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“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으며,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였다.”면서, “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창성 (044-205-1401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진 (044-205-14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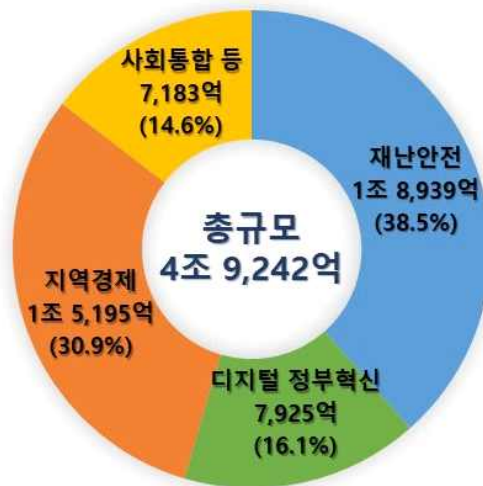


□ 총예산 : 72.1조원 (²³본예산 80조 4,878억 대비 △8.4조, △10.4%)

< 총예산 현황 >



< 4대 분야별 사업예산 현황 >



□ 분야별 주요사업

① 재난안전 1조 8,939억

- **국정** 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(135억, +67억)
- **국정**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(186억, +105억)
- **국정** 재해위험지역정비(8,629억, +1,596억)
- 재난대책비(6,000억, +4,500억)

② 디지털 정부혁신 7,925억

- **국정** 정보보호인프라확충
(모바일신분증·Any-ID)(282억, +153억)
- **국정**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(163억, +77억)
- **국정** 지능형서비스확대및운영
(혜택알리미서비스구축)(34억, +27억)
- 중앙행정기관등노후장비통합구축
(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지원)(758억, +416억)

③ 지역경제 1조 5,195억

- **국정** 지역발전활성화(71억, +19억)
- **국정**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
(주소정보산업지원)(44억, +18억)
- 지자체경쟁력지원(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)(20억, +5억)

④ 사회통합 등 7,183억

-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조성(건립비용 제외)
(22억, +9억)
- **신규**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
(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)(45억)